

	<b>보 도 자 료</b>		• 미래창조 금융
	<b>브리핑(14:00)시부터 보도 가능</b>		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
작성 부서	금융위원회 보험과		
책 임 자	김진홍 과장 (2156-9830)	담 당 자	진선영 사무관 (2156-9831)
배 포 일	2014. 7. 15.(화)	배 포 부 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15매

## 제 목 : 「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」 [2014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] 발표

◇ '14.7.15일 금융위원회(위원장: 신제윤)는 관계기관 공동작업 및 현장 규제개선 건의 의견수렴을 통해 「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」(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)」을 마련하였음

### I. 필요성

#### 1 보험, 시대에 따른 변화가 요구

- 보험에 대해서는 그간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으나 여전히 어렵고 불편하다는 인식도 일부 존재

\* “복잡하다·어렵다”, “돌려받는 보상이 미흡하다” “필요한 보험은 없거나 못 든다”

- 국민경제 발전과정에서 내자조달과 저축확대의 역할을 담당하며 고용 창출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의 저성장 기조, 고령화 등 새로운 변화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

⇒ 변화된 환경을 新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, 규제개혁을 통해 신상품·영역 개척과 새로운 파이를 창출하고 소비자 만족을 제고할 필요

◇ 보험 전반의 낙후된 관행을 극복하고, 소비자 신뢰 회복을 통해 혁신과 건전화를 이루어 보험이 새로운 환경 대응의 중심축이 되어야 할 시점

## 2 환경변화와 우리 보험의 재도약 가능성

### 1 보험이 처한 환경적 요구

- (저성장 기조) 글로벌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로 인해 과거의 전략을 단순 유지해서는 성장세 악화를 면하기 곤란
- (인구구조의 변화)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확대되고 노동 인구의 감소로 인해, 과거와 같은 급속한 보험수요 증가는 근본적 제약
- (재무건전성 강화 요구)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도 가일층 요구되는 상황

### 2 새로운 성장·비즈니스 기회의 대두

- (신종위험 보장) 과거에 없던 복잡·다기화된 신종 위험에 대한 보험 본연의 위험보장 비즈니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확대
  - 날씨·기후변화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위험에 대한 보험수요가 늘고 있고, 고가(高價)상품의 파손 등 제조업과 연계된 보험수요도 증대
- (고령화) 빠른 고령화와 노후인식 제고로 주택연금, 고령자 대상 보험, 생애주기 자산관리업 등 고령화에 따른 신수요가 급격히 부각중
- (보험의 자본시장 역할 확대) 고령사회로 진입 이후 빠르게 축적될 연금자산은 보험의 자본시장 Player 역할 확대를 요구
  - 아직까지 우리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은 양호한 편이나, 과거와 같은 고속성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산의 효율적 운용은 중요한 과제

\* '13년 운용수익률 비교 : (생보) 4.6%, (손보) 4.0% (주식형펀드) 1.2%

◇ 이러한 환경 변화에 과거의 낡은 제도로만 대응하면 새롭게 제도약할 기회도 상실할 우려

⇒ 직면한 도전요인을 우리 보험의 새로운 기회와 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제도개선과 규제개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

## II. 보험 혁신 및 건전화 기본방향

◇ 보험 분야의 '좋은 규제(Better Regulation) 시스템' 을 확고히 구축

⇒ 「신뢰제고」·「미래대비」·「산업혁신」의 3대 방향에서 추진

※ 분야별 규제개혁 방향

- (시장질서·소비자보호) 엄정 시장규율, 자기책임 원칙
- (영업·상품개발 등) 자율 확대, 창의·혁신 유발

### 1 보험 신뢰 제고

□ 보험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및 일선 모집질서 건전화 유도로 소비자가 '믿고 찾을 수 있는 보험' 유도

- ▶ 모집질서 교란행위 정화 및 보험사기 시스템 강화
- ▶ 보험상품 공시 강화 및 상품 가입 채널 다양화
- ▶ 불공정 행위 억제 및 보험금 지급 불만 해소

### 2 미래대비 기능 강화

□ 과거 내자조달과 모집인력 고용의 소극적 역할을 벗어나 노후 대비와 사회 안전망의 기둥으로서 위험보장(Risk Management) 기능 대폭 강화

- ▶ 연금상품 편의 제고 및 신종위험·미래 대비 상품개발 유도
- ▶ 장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
- ▶ 연금가입 지원 및 퇴직연금 수익성 제고

### 3 보험산업 혁신 유도

□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자율과 창의에 근거한 다양한 상품 출시 및 업무자율·경쟁 촉진 유도

- ▶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적립금 적정화 및 가격 경쟁 촉진
- ▶ 실물지원 및 자본시장 Player로 기능토록 자산운용 여력 확충
- ▶ 능동적 건전성 강화 유도 및 국제 회계기준 변화 대비

## <보험 혁신 및 건전화 추진 체계>

“차원높은 위험보장”

안전제고 + 노후대비 + 시장창출

보험의 혁신 및 건전화 유도

보험 신뢰 제고

- 소비자 알 권리
  - 상품공시 개선
  - 안내자료 평가
- 모집 질서 확립
  - 모집이력관리시스템
  - 보험사기 시스템
- 채널선택 확대
  - 단종보험대리점
  - 온라인보험슈퍼마켓
- 보험금 불만 해소
  - 불공정 행위 억제
  - 부지급 사례 공시

미래대비 기능 강화

- 연금상품 편의
  - 인출기능 부여
  - 사망보험금 연금화
- 신종위험 상품
  - 지수형 날씨보험
  - 대재해 채권
- 장수 리스크
  - 장수채권 발행
  - 장수리스크 명시 반영
- 연금가입 제고
  - 운용규제 완화
  - 가입인센티브 지원

보험산업 혁신 유도

- 상품경쟁 촉진
  - 신종위험을 할증
  - 보험료 다양화 유도
- 자산운용 규제완화
  - 해외 금융업 영위
  - 일반계정 자금이체
- 보험사 건전성 제고
  - 준비금 적립 적정화
  - 지급여력 강화유도
  - 국제회계기준 대비

부작용 차단 및 상시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

◇ 부작용 차단장치 마련

- 계속·반복적 위법행위 제재강화
- 명료·엄정한 퇴출기준 마련
- 과태료·과징금 부과체계 정비

◇ 상시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

- 보험규제개혁 TF 상시·정례화
- 보험입법 자문단 구성
- 보험 규제건의 통합 창구 마련

### Ⅲ.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 주요내용 (☞ 상세내용 별첨)

#### 1 보험 신뢰 제고

##### 가. 소비자 알 권리 제고

- ☐ (소비자 중심의 상품공시) 상품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공시 개선
  - 중복·과잉\*으로 오히려 이해도를 저해하는 보험안내자료 간소화,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보험료 비교 지수 등을 쉽게 개선
    - \* 주요 상품의 경우 상품설명서·가입설계서 분량이 15~20장에 달함
- ☐ (보험상품 이해도 평가 확충) 보험가입 단계에서 실제 소비자가 참고하는 보험 안내자료\*에 대한 이해도 평가를 실시
  - \* 핵심상품설명서, 상품설명서, 가입설계서 등
- ☐ (단체보험 설명의무 강화) 단체보험\*이라도 가입자(피보험자\*\*)가 원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·안내
  - \* 실질적으로 계약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, 가입자인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형태의 단체보험 (예: 단체 여행자 보험)
  - \*\* 보험계약자가 아니므로 현재는 상법·보험업법상 설명의무 이행 대상이 아님

##### 나. 모집질서 확립 및 건전화

- ☐ (설계사 모집이력 관리시스템 도입) 시장 기능에 의한 보험 모집질서 건전화를 위해 보험설계사의 모집이력\*을 집중·관리
  - \* 모집계약 현황, 불완전판매 현황, 제재 이력 및 모집수당 환수 이력 등
- 보험회사·대리점은 소속 설계사의 모집이력을 보험협회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협회는 모집이력을 상호 교환
  - 모집정보 범위와 정보조회 방법·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
- 보험회사·대리점은 소속 설계사 위촉 시 모집이력을 반드시 조회하고, 조회 결과는 위촉여부 의사 결정에 반영

- ☐ (GA 관리감독 강화) 일정규모 이상(예 : 500인)의 보험대리점에 대해 관리·감독 강화\* 방안 마련
  - \* 현장 실태조사와 연구용역 실시 후 부실 대리점 진입 억제 및 실효적 퇴출 방안 등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 강구

##### ☐ (보험사기 방지 시스템 강화) 유관 기관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

- 보험회사 → 금감원 → 검찰·경찰간 보험사기 인지·조사·수사 과정의 연계\* 체계 강화 및 각 단계별 제도개선 추진
  - \*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의심 건을 금감원에 보고하고, 금감원은 여러 보험회사의 보고 건을 취합·조사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
-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 시, 보험사기 연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보 인프라 마련

##### 다. 보험 상품 및 채널 선택기회 확대

- ☐ (제품·서비스 연계 보험 활성화) 휴대폰 보험과 같이 보험사와 제품·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보험상품\* 허용
  - \* 휴대폰 보험과 같이 보험사가 제품·서비스 제공자와 연계하여 태블릿PC, 디지털 카메라 및 중고차 등과 관련한 연계 보험 제공
- 다만,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입자에 대한 설명의무 부여, 보상 책임 명확화 등 보험상품 제공자간 역할·책임 명확화
- ☐ (단종보험대리점) 제품·서비스 연계보험과 관련하여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도입\*
  - \* 예시) 부동산중개업자가 주택 매매 중개 시 주택종합보험 판매,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PC보험(파손시 수리 보장) 판매 등
- 단종보험대리점은 본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본업과 연계된 소수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점을 고려하여, 일반 보험대리점에 비해 대리점 등록 요건(자격 시험, 교육 이수 등) 완화

- (온라인 보험수퍼마켓) 소비자가 필요한 보험상품을 온라인상에서 비교·조회 및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수퍼마켓 구축 검토
  - 초기에는 상품비교가 용이한 단순·표준화된 상품을 중심으로 도입하고 향후 운영 성과를 보아가며 단계적 확대

## 라. 보험금 지급관련 불만 해소

- (보험금 지급 공정성 제고)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\* 관련 불공정 보상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 근거를 마련
  - \* 현재 보험금 산정·지급 관련 민원이 전체 보험민원의 37% 차지
  - 현행 보험업법은 ① 보험금 청구·지급 관련 규정이 매우 미흡하고, ② 표준약관을 통해 절차상 위반에 대해서만 간접적으로 제재
    - 보험금 청구·지급 관련 불공정보상행위의 유형을 상세히 규정하고 엄정 제재하는 미국 등 해외에 비해 소비자 보호에 취약
  - 해외 사례를 준용하여 보험금 지급 관련 잘못된 정보 제공, 보험금 포기를 위한 악의적인 소송 제기 등 유형을 보험업법에 규정
- (보험금 부지급·삭감 사례 안내) 보험권유 단계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주요 사례\* 안내(상품안내자료에 포함 등)
  - \* 보험계약자가 어떠한 상황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,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한 사례 빈번
- (보험사 제기 소송건수 공개)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 현황 공개(정기공시 사항으로 반영)
- (보험금 지급 현황 조회 서비스 제공) 계약자 등이 일정한 본인확인 절차\*만 거쳐도 보험금 청구·지급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
  - \* 신용카드, 휴대폰, I-Pin 및 공인인증서 인증 등

## 2 미래대비 기능 강화

### 가. 연금상품 편의 제고

- (연금수급방식 개선 상품) 연금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을 의무화하고, 나머지는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도록 개선
  - \* 연금가입시 정한 의무비율 이내(예 : 25%) 또는 특정 이벤트(의료비, 학자금 수요 등) 발생시 연금적립액 자유 인출이 가능하도록 허용
- (비건강인 연금상품)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\*에게 보다 높은 연금액을 지급
  - \* 장애인(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'14.5월 출시), 노인장기요양인, 중대질병자
- (고령자 특화 연금상품)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선지급하거나 사망보험금을 적게 설계하여 높은 연금액 지급
  - \* 기대보다 수명이 길어져 자녀들이 충분히 장성한 경우 사망보험금 수령보다는 해당금액을 연금 방식의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수요가 증가

### 나. 신종위험 및 거대위험에 대비한 상품 출시 유도

- (지수형 날씨보험 허용) 자연재해, 날씨 등 자연현상을 기초로 하는 지수형 날씨보험 취급 허용(미국, 영국 등은 이미 허용 중)
- (대재해채권 도입) 거대재난(美 카트리나 등)에 대한 보험인수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CAT-Bond(Catastrophe Bond) 도입 검토
  - 보험회사가 정상적 상황에서 사실상 보상이 불가능한 지진, 태풍 등 대재해 손실 위험을 채권화하여 자본시장 투자자와 공유
    - \* 특수목적회사 설립 및 대재해채권 발행을 통해 보험사(원보험사, 재보험사) 외에도 일반기업, 정부기관, 연기금, 헤지펀드 등 다양한 투자자 참여 유도
- (의무 배상책임보험 확대) 新보험수요 창출 및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의무 배상책임 보험 확대 추진
  - \* 연안체험활동배상책임보험 : 연안 체험활동중 피해 보상
  -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: 독성 화학물질 유출 등 환경오염 피해 보상

## 다. 장수 리스크 대비

- (장수채권 도입) 금융기관의 장수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장수채권(Longevity Bonds)\* 발행 추진

\* 장수리스크 관리대상 집단의 생존율과 연계되어 원리금을 지급하는 상품

- (장수리스크 선제 관리 강화) 연금판매 금융사가 장수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준비금, 상품개발 제도 보완

## 라. 노후상품 가입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

\*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

- (연금저축 가입시 혜택 강화) 노후대비 자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저축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방안 검토

- (저소득층 및 베이비부머 세대 지원) 연금저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및 베이비부머의 연금저축가입 지원방안 검토

## 마.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연금화 유도

\*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

- (일시금 수급경향 완화) 퇴직금의 일시금 인출을 축소하고 실질적으로 연금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마련

- (운용규제 완화) 세분화된 개별 위험자산별 보유 한도를 폐지 또는 단순화

- (디폴트 옵션 도입 검토)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지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사전에 정해진 표준 포트폴리오에 따라 운영

- (계약형 방식 다양화) 특정금전신탁·보험계약에 한정된 연금계약 방식을 다양화

## 3 보험산업 혁신 유도

### 가. 보험상품 경쟁촉진 및 건전화

- (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출시 지원) 과거에는 가입이 어렵던 고령자·유병자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

\* (현황) 암보험은 적정 보험료 예측이 어려워 '05년부터 '12년까지 판매 중지한 전력

- 현재 위험률\*에 30%까지 안전할증률을 부가할 수 있으나, 장래 보험금 예측이 어려운 위험보장은 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

\* 위험률 할증이 보험료 인상으로만 전가되지 않도록 사후정산 방안도 마련

- (건전한 보험료 경쟁 유도) 보험사는 자기책임하에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내부 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해당 결과를 상품 신고시 제출

\* 현금흐름방식의 보험료 산출체계가 도입되었으나, 표준이율 및 구두지도에 근거하여 대부분 보험사가 유사한 수준으로 보험가격을 책정한다는 지적

- (금리에 연계한 사업비 체계 도입) 금리가 하락할 경우 소비자 부담으로만 전가되지 않도록 보험상품 구조 개선을 추진

\* 저축성보험 원금도달 시기: 공시이율 6% 5년 → 공시이율 3% 8년

- 저축성보험은 표준(시중)이율 하락시 사업비가 감소\*하도록 설계, 보장성보험도 저금리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지속 검토

\* (안) 환급률 100% 의무화 시점을 보험만기에서 납입완료 시점 등으로 단축

- (상품개발 기준 개선) 상품 안내가 부실\*해지거나 불필요한 보험사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상품개발·심사 기준 개선

\* 참조위험률의 산출 일정이 촉박해 상품개정이 지연되고, 신고상품 판매 일정도 불확실해지게 됨에 따라 적기에 모집인 상품교육도 이루어지지 못함

- 방카상품 중 단순 개정은 사전신고\*에서 사후보고로 변경하고, 참조위험률은 변경 시행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고(현행:30일), 신고상품의 신고일부터 판매까지 일정을 보다 명확화(현행:30일이내)

\* '13년 전체 신고상품 중 단순 방카상품 변경이 48% 점유(519건+1087건)

- (유배당 상품 활성화) 계약자와 주주간 이익배분을 변경<sup>\*</sup> 이후 상품출시가 거의 중단<sup>\*\*</sup> 된 유배당 상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

\* 계약자 지분을 70%에서 90%(‘00년)까지 확대함 → 주주지분은 10%로 감소  
 \*\* 수입보험료의 7.7%까지 매출 하락, 현재 유배당 상품은 연금저축 보험이 유일

- 유배당 상품의 계약자와 주주간 이익 배분율을 합리화하고 보험사에 판매유인을 제공하는 방안 강구

## 나. 자산운용 규제 완화

### 1 자산운용 대상 및 여력 확대

- (국내 PEF 외화표시 지분 투자 허용) 보험사가 거래가능한 외화증권의 종류에 국내 PEF의 외화표시 주식·출자지분 추가

- (부채 리스크 관리 지원) 보험사가 운용하는 변액보험, 외화책임준비금에 대하여 단순 위험관리 목적의 자산운용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

- 자산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회피 목적의 헤지거래는 파생 상품 한도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손익 변동성 완화 방안도 검토

- (비상위험준비금의 지급여력 인정) 비상위험준비금<sup>\*</sup> 중 세금충당 목적의 일부 금액(이연법인세)은 지급여력금액으로 지속 인정

\* 대규모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여 손보사가 적립하는 금액(회계기준상 자본항목)

- (계정별 자금운용의 융통성 확대) 모든 특별계정 상품판매 초기에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일반계정의 자금이체 허용

\* (현행) 변액보험 등 Positive 방식 → (개선) 모든 특별계정 상품 Negative 방식

- (투기목적 자금대출 금지규제 폐지) 투기와 투자의 구별이 사실상 어렵고 상품·유가증권 투기만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

## 2 해외진출 여건 조성 및 자회사를 통한 자산운용 활성화

- (해외현지 일반 금융업 영위 허용) 보험사가 해외에서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 금융업(은행·증권) 영위 허용

- (해외 SPC를 통한 자회사 소유절차 개선) 보험사가 해외 SPC를 통해 현지 보험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 신고절차로 완화

- (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자회사 소유요건 완화) 보험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회사로 소유시 신고요건을 완화 (지분 15% → 30%)

- (벤처 투자조합 등의 자회사 자산운용 규제완화) 벤처 투자조합 등을 자회사로 소유 시 동 자회사 관련 자산운용 규제 배제

## 다. 보험사 건전성 제고 유도

- (책임준비금 산정기준 정상화)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하여 적절한 수준의 책임준비금이 적립되도록 표준이율<sup>\*</sup> 산출방식 변경

\* 장래 보험금지급을 위해 최소로 적립해야 하는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

- 자산운용 비중이 높은 채권 수익률의 연계성<sup>\*</sup>을 키우고, 금리지표를 다원화<sup>\*\*</sup>하여 표준이율 산출시 안정성 확보

\* (현행) 3.5%+안전계수×시중금리 → (변경안) 금리구간별 안전계수×시중금리

\*\* (현행) 국고채 10년 → (변경안) 국고채 5년, 10년, 20년

- 건전한 경쟁 유도를 위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보험사는 표준이율을 일정 수준 높게 적용토록 하여 보험료 인하 여건 제공

- (보험사 지급여력 강화) 지급여력(RBC<sup>\*</sup>) 기준 강화를 추진하되, 보험사의 과도한 자금조달 부담을 고려, ‘16년까지 단계적 시행<sup>\*\*</sup>

\* 보험부채 이외에 보험금 지급 안정성을 위해 추가로 적립해야할 위험자기자본

\*\* 국제기구 평가 및 IFRS 2단계 일정(‘18년)을 고려하여 ‘16년까지 완료

- 비명시적 지급여력 구두권고(150% 수준)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보험사의 자율 확충노력 유도

- **(공시이율\* 조정범위 확대)** 공시이율 결정시 경쟁 촉진 및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공시기준이율의 10%에서 20%까지 조정범위 확대
  - \*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료 적립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
  - 조정범위 확대시 소비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만큼 환급금 개선 등 위한 보완 방안을 함께 마련
    - \*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인하, 환급율 예시 강화 등
- **(국제회계기준 대응)** 현행 부채적정성 평가제도를 점진적으로 보완·강화하여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에 미리 대응
  - ※ RBC 등 재무건전성 제도개선 로드맵은 조만간 발표할 계획

#### 4 부작용 차단을 위한 시장규율 강화

- **(소비자 권익 침해 제재근거 마련)** “소비자 권익 침해”가 이루어진 경우도 보험사·대리점 등에 대한 행위제제 요건으로 규정
  - 현행 제제규정은 “건전경영 훼손”만 요건\*으로 하고 있어 중대한 소비자 권익 침해 시에도 실효성 있는 제제에 한계
    - \* 보험업법 제134조(보험회사에 대한 제제) 및 제136조(보험대리점에 준용)
- **(계속·반복적 위법행위 제제강화)** 보험사·대리점의 영업이나 기초서류 등 중요사항의 계속·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해 가중 제제 근거 마련
  - 중요사항\* 위법행위가 상습화·반복화(예: 2년내 3회 위반 반복 등)된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업무정지 이상의 제제 근거 도입
    - \* 기초서류상 보험금 지급·이익처리 위반, 설명의무 고의누락, 부당승환 계약 유도 등
- **(대형 보험대리점 규율 강화)** 금융기관 보험대리점, 대형 GA 등이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 가중 제제 근거 마련
  -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구속성 보험계약(끼기), 대형 GA의 불완전 판매 등 위법 정도가 일정수준\* 초과시 업무정지 이상 제제
    - \* 평균 위반횟수, 대리점 규모, 수수료 수입규모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준 마련

- **(퇴출 대리점 우회진입 방지)** 법령위반으로 퇴출되었던 대리점이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우회적으로 재진입하는 것을 차단
  - 보험업법의 등록거부 사유에 위와 같은 우회등록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위반기준 및 검사방안은 추후 마련
- **(과태료·과징금 체계 정비)** 시장현실에 맞게 과태료·과징금의 부과기준(현재 상한액 5천만원 불과)을 상향·현실화하고 근거도 상위 법령에 규정
- **(제재체계 점검 정례화)** 제재 및 과태료·과징금 기준 정례 점검 추진
  - 주기적(예: 1년)으로 감독원과 제재 양정기준을 협의·검토하고 동 검토내용 및 제도 개선안을 금융위에 보고토록 조치

#### 5 상시적인 규제개혁 과제발굴 및 제도화 시스템 구축

- **(보험규제개혁 TF 상시·정례화)** 보험권 규제개선 과제 수시 발굴 및 의견 수렴, 구체화를 위한 규제개혁 TF 구성·상시 운영
  - \* 업계 전문가, 보험연구원, 보험협회, 개발원, 학계, 감독원 등
  - 매년 9월로 예정된 “금융규제 정비의 달”에 맞추어 보험 분야 종합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실무적으로 뒷받침
- **(입법 자문단 구성)** 법률 전문가와 유관기관 중심으로 보험입법 자문단 구성
  - \* 보험법학회, 보험학회, 소비자 단체, 보험연구원, 보험협회, 개발원 등
- **(분야별 협의체 활성화)** 보험사기, 정보, 공공보험 연계방안 등 유관 기관 중요 협업과제에 대해 협의체\* 활성화
  - \* 보험조사협의체, 보험정보협의체, 개인의료보험정책협의체 등
- **(규제건의 통합창구 마련)** 보험 유관기관 공동 대표전화 및 창구 운영
  - \* 금융위, 금감원, 보험개발원, 보험협회 공동으로 대표 전화 마련(가칭 ‘1414’)

## IV. 향후 추진계획

### 가 추진 원칙

- ☐ (조기개선) 금번 발표 과제는 하반기에 보험업법령 개정 등 규제 개선에 즉시 착수하여 가급적 조기에 시행
- ☐ (체감효과 중심) 가시적 체감 성과가 도출되도록 일선에서의 업계 반응·전문가 의견 등을 철저하게 점검·관리·피드백
- ☐ (장기과제) 미래 지향적이고 이해관계가 있는 과제는 공론화, 연구 용역 등을 통해 단계적 접근과 미세조정

### 나 향후 일정

- ☐ 법령 개정과 무관한 사항(유권해석, 모범규준 등)은 즉시 추진
  - \* (예시) 보험사 소송건수 공개, 보험금 부지급·삭감 사례 안내 등
  - 단순 사업(시스템 구축, 상품출시 등)도 로드맵 확정 후 즉시 착수
    - \* (예시) 설계사 모집이력 관리시스템, 보험금 지급현황 조회, 보험사기 방지 시스템 등
- ☐ 하위법령(시행령·감독규정·시행세칙 등) 개정 사항은 금년 내 완료
  - \* (예시) 상품 신고기준, 보험사 건전성 제고,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등
- ☐ 법 개정사항은 금년 내 정부안 마련 및 국회 제출
  - \* (예시) 보험금 지급 공정성 제고, 소비자 권익 침해 제재근거, 방카 신고기준 개선 등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


넓게 들겠습니다  
바르게 알려겠습니다